

5·18조사위, 결과 보고서 등 오늘 공개

지만원 '광수' 억측 논파하고 성폭행 사례 확인 성과 한 달 늦은 공개엔 지역사회 "능장 논의·검토" 지적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온 극우 인사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성범죄 실상을 파헤친 각각의 개별보고서를 공개한다.

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된 두 과제의 개별 보고서 공개를 통해 5·18을 둘러싼 억측과 왜곡, 편파가 잠재워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미 한 달 전 공개된 다른 개별 보고서와 공개 시점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능장 검토·발표'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조사위는 '5·18 당시 북한 특수

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2개 개별 보고서를 다음달 1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보고서에는 5·18을 왜곡·편파해온 인사들이 주장해온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위 차원의 검증 결과가 담겼다.

앞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은 관련 억측을 담은 서적을 펴내며 5·18을 지속적으로 왜곡·편파해왔다. 지체를 중심으로 유포된 해당 내용은 지난 2022년 조사위가 광수로 지목됐던 차복환씨를 찾아내 직접 만나 조사, 공개 석상 증언 기회를 마련

하면서 사실상 사장됐다. 더불어 지체는이같은 내용을 담아 출간한 자신의 책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재판부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는 지난 2018년 피해자 발굴을 계기로 출범한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피해 실상 규명에 한계가 있어 시작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실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다수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했다.

계엄군 사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무용처럼 떠돌았다는 제보자 진술을 확보, 계엄군들로부터 상급자가 강간 등을 자행했다는 증언도 얻어냈다.

또 실제 계엄군이 5·18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진적소탕 작전'을 벌여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고 군이 이를 무마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조사위 조사 결과 생존 피해자 중 20명의 진술을 법적 요건을 갖춘 증거로 남길 수 있었고 이는 국가 폭력이 남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사회관계적 2차 피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가 됐다.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이번 두 보고서가 기존 보고서 공개 일정 대비 한 달여 늦게 공개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진상규명 결정·공개되는 개별 보고서 특성상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검토 절차 모두 능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광주 지역 사회의 지적이다.

/김도기 기자

“비전 없는 국정 운영 두고 볼 수 없다”

광주 찾은 김부겸, 복구 후보 출근길 유세 현장 지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 광주를 찾아 “비전 없는 국정 운영을 막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북구 북구청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정준호 후보와 광주북구를 전진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권에 국가 운영을 맡겨왔지만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무책임, 무능력하게, 비전 없이 국정을 운영한 적은 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함께 출산율이 0.72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않는다. 많은 자라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재산을 조금 더 내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이상 대한민국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공동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선거에 나섰다”며 “광주 시민의 든든한 벗이 되고자 나선 후보들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고 호소했다.

경쟁자인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던지는 시원한 광약에 매료되고 박수를 보내시는 것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책임을 져야하는 제1야당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없고 또 조심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준 노무현·분재인 정권 이후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부족했고 마음만 앞서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5·18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된 정신 또한 온 국민적 합의가 된 헌법적 가치로 아직 지미대검시키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광주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5·18조사위 보고서 왜곡 심각… 폐기 검토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부실·왜곡이라 혹평하며 대통령·국회에 보고할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함께 29일 성명을 내고 “5·18진상조사위가 순차 공개한 조사 결과 개별 보고서를 시의회·시, 5·18기념재단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현 보고서는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 조장 우려가 있어 그대로 공개돼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5·18 역사 왜곡 소송에 대해 10여년간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친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사실 인정과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이 있었다. 개별 보고서 간 모순 또는 부정합(들어맞지 않음), 문서 신뢰를 해치는 오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 보고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조사과제에 포함된 근거 피해 과제의 경우,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왜곡 정도가 극심하다”고 역설했다.

‘호남 정치 1번지’ 적임지는… 안갯속 광주 동남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달 30일 동구 총장으로 상권은 경기 침체의 그늘의 벗어나지 못한 듯 ‘입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곳 상인들과 주민들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호남 정치 1번지’ 명성을 되찾아 줄 후보를 두고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누가 더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저마다 의견도 엇갈렸다.

이곳의 한 상인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묻자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의 발길이 끊겨 당장 먹고 사는 걱정 밖에 없다”면서 고개부터 가로 저었다. 그러면서 “총장로는 한때 호남 최대 상권이라 불렀지만 이전 옛말이 됐다”며 “침체를 겪는 지역 상권에 되살릴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후보가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명동에서 만난 한 시민 역시 “지역 사정에 밝아야 세심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이라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무소속 김성환 후보의 지지를 표명했다.



총선 레이스 본격 시작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 주변에 제22대 총선 광주북구를 출마자들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가 걸려있다.

“X같이” “입이 쓰레기통”...막말에 고소·고발까지 난타전

한동훈 “개같이·쓰레기” 민주 “입이 쓰레기통·짐승만도”



오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31일 여야는 휴일에도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발언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총선이 비방과 막말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여야 후보들의 재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각종 의혹 제기에도 고소·고발 등으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부터 연일 상대 진영을 향해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기 부천시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편법 대출 논란의 양문석 후보 등 거론하며 “정치 뺏같이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맹공했다.

인천 계양을 유세에선 “범죄자를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사람과 자기가 감옥 안 가겠다고 당선되겠다는 사람이 승부가 되겠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신촌 집중유세에서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즉각 “그 입이

쓰레기통”이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강민석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니냐”며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성범죄 변호 후보들과 역사 왜곡 막말 후보 등 각종 논란의 국민의힘 후보들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선거도 좋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은 것”이라는 격언을 소개하며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고 쓰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차라리 놀았으면 나한테 나라를 망쳤지 않았는가”라고 저격했다.

/뉴스1

민형배 VS 이낙연...광주 광산을 선택은

총선 화두는 '민생·정권심판'...경기체제 불만 토로



인물론을 들고 나온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광주 광산(비야동·침단1동·침단2동·신가동·신창동·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전국의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다.

현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반면 인물론이나 민주당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제3야당을 고려하는 시민 등 여론이 갈라지고 있다.

주민 평균 나이 39.5세. 광주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정적이나 당론을 고려해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사흘째인 지난 30일 광산구 침단지구 일대에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거송이 울려 퍼졌다. 후보자의 이름을 따 개사한 트로트 선거송이 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원 10여명은 선거송에 맞춰 울음을 이어갔다. 맞은 편 도로에는 선거원들이 “사람이 온다”, “큰 인물”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선거 차량에 탄 후보는 주위를 위해 시민들의 눈을 맞추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다가가 “꼭 좀 경기를 살펴달라”고 호소하거나,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생’이었다. 대부분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이었지만 “투표를 하면 살림이 나아지느냐”는 회의감도 공존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의 기준은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느냐였다. 동시에 침체된 경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뽑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도기 기자

양부남, 20대 아들에 한남동 주택 증여

“편법 대출·빚수 증여·갹투자 아냐”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같은 당 공영은 경기 화성을 후보가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부모 찬스’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 단독주택 2채를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19년 해당 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로 양 후보는 당시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었다. 증여는 재개발 사업 시

행계획 인가가 난 후 8개월 후에 이뤄졌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후보 캠프 측은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서도 ‘불법대출도 없었으며, 빚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관계자는 “2004년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했고, 당시엔 재개발 호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도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뉴스1

“유권자 기만·오만함 “방송토론 불참한 민주당 조인철 못매

광주 서구갑 조인철 ‘건강상 이유’ 불참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광주지역 첫 법정 선거방송 토론에 불참하면서 토론이 파행을 빚은 가운데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조인철 후보의 토론 불참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견해, 정책들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방송 1시간30분을 남기고 불참한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광주시민의 알권리를 강그리 무시한 행태”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 주식 21억원어치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이 회사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기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

/김도기 기자